

## “中, 강제복송 중단하라”... ‘두 국가론’에도 우려 제기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 범국민연합,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이 15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와 반한법적인 두 국가론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복송 정책 중단과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에스더기도운동,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 탈북민강제복송반대세계연합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선영제 전국탈북민강제복송반대국민연합 사무국장의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정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김봉수 공동대표(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민경석 공동대표(탈북민강제복송반대세계연합), 신은숙 공동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가 차례로 발언했으며,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복송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숨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정치적 박해와 식량난, 종교 탄압과 인권유린을 피해 생명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정치범수용소 수감, 심지어 처형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며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단순한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며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이주민이 아니라 난민 또는 최소한 난민 지위 심사의 대상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1988년에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법의 핵심원칙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민 강제복송은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였고,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인도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미국의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이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최 측 제공

회 산하 중국위원회(CECO)는 중국당국이 2023년 한 해에만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하였으며, 이들이 귀환 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의 헌법적 토대로 이해되어 왔다”며 “헌법 제3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민주적인 통일정책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두 국가 체제’ 또는 ‘평화적 공존’ 중심의 새로운 대북정책 논의가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일 현 정부가 북한과 동조하여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영구 분단을 확정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역사적, 인도적 책임을 축소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주민의 생명과 자유는 정치적 유희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또한 탈북민은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정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는 여성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북한 여성들은 탈출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라며 “대부분이 여성인 탈북민(약 70%)은 중국 국경을 넘는 순간 인신매매의 표적이 된다. 브로커에게 팔려 강제 결혼, 성매매, 가사 노동 착취를 당하며,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고 말했다. 또 “송환된 여성들은 북한에서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며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 출산한 아기는 영아 살해를 당한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사례로 중국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406명의 탈북민을 강제 복송했으며, 2020년 이후 누적 인원은 1,076명을 넘는다고 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212명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중국 각지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으며, 2025년에도 강제결혼 생활을 하던 여성들과 구금 중이던 여성들이 잇따라 복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어머니 A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15살이었던 아들의 탈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A씨는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감수했다”며 “아들은 한국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중국

에 남아 있다가 2025년 1월 한국행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고 현재 강제 복송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송환된다면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또는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중국 정부는 그 희생마저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를 향해 “즉각 모든 탈북민의 강제 복송을 중단하십시오.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유엔난민기구(UHCR)의 접근을 허용하십시오. 안전한 제3국 이주를 보장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 △강제 구금된 탈북민 석방 및 유엔 난민 지위 보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주민 민생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 △통일부장관의 ‘두 국가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을 적극 옹호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중국의 강제복송 정책 중단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정부가 강제복송을 멈추는 그날까지, 북한주민들이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 “통일 이후 北교회 재건, 목회자보다 전문 성도 역할 커”

기침 통선협, 15일 2026 침례교회 통일선교포럼 개최

기침 총회(총회장 김인수 목사) 통일선교협의회(회장 김원정 목사)는 15일 대전 대흥침례교회에서 ‘열방을 향한 교회의 통일선교 사명’이라는 주제로 2026년 침례교회 통일선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강연 강사로 김영식 목사(포타미션)가 나섰다. 그는 “초장기 탈북

민 선교는 물질 위주의 선교방향이었던. 1995년과 1996년 북한 대홍수에 따라 한기종 등 교계 단체들이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벌였다. 북한에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탈북민의 보호에 집중했지만 개교회별로 탈북민의 교회 등록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경쟁 초래 등 문제가 생겼다. 원인은 탈북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북한교회 재건의 핵심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확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해 가장 먼저 이러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교회 등을 짓는 시기는 맨 나중에다. 이 때문에 목회자보다 정치, 경제 등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북한에 진출하게 된다. 여기에는 크리스천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목

회자는 먼저 이들에게 설교와 집회를 통해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일깨워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 건물은 짓지 않더라도 전문인 크리스천들이 NGO, 교육, 복지, 의료활동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접촉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된 교회 전문인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강한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이를 위해선 첫째, 탈북민 가운데 소수 지하교인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먼저 들어야 한다. 둘째, 중국 NK 사역자들의 경험과 정보를 취합해 북한 지하교회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그루터기 성도의 후손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연구해야 한다. 넷째, 북한교회 재건의 리더는 결국 북한 주민 성도이어야 한다. 남한교회는 헌금을 통한 자본과 그들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돕는 형태로 출발해야 한다. 결국 남한에서 훈련된 탈북민 목회자와 및 탈북민과 교제한 남한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행사에서는 탈북민 출신 뉴코리아 교회 김은진 사모가 간증했다. 김 사모는 “내 친가와 외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다. 친가는 함경북도 선봉에서, 외가는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김영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방됐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결혼하고 내가 태어나게 됐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집에서는 남몰래 예배가 드려져왔다. 할머니가 예배를 인도하셨다. 외할아버지나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다. 저는 할머니를 통해 찬송가를 많이 배웠다”고 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집에서 드리던 예배가 발각되기 전까지, 할머니로부터 말씀과 찬송가를 배우며 자랐다. 발각된 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모진 핍박을 받았다. 저는 가사로 조선족 목회자를 통해 탈북해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뉴코리아교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기침 통선협

회 사모로 사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증조부는 함경북도 선봉군 사회라에서 사회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대남 목사라는 사실을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다. 증조부는 1951년 선봉군 서포항 바닷가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공산당원에게 바닷가에 수장됐다”고 했다. 또한 “북한 땅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집을 찾아서 십자가를 세우고 싶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증조부의 교회터를 다시 찾고 싶다. 제가 증조부, 할머니, 아버지의 신앙 유산

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사회침례교회는 1889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펜윅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뒤로는 펜윅의 조선 선교를 다짐하게 했던 허드슨 테일러와 DL 무디에게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에게로 올라가고, 그 이전 교부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로 거슬러 간다. 그리고 예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대물임”이라고 했다. 이 밖에 행사에서는 김성우 선교사(한선미션)가 강의했다. 노형구 기자

[인터뷰] 이하정 완승건축 사사무소 대표 “건축은...” >> 7면

기독교 영화 ‘더 초즌(The Chosen)’ 장편 개봉해 >> 24면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예타 통과(50분 예상)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